

“尹, 국감 증인 불러야”...민주, ‘고발 사주’ 의혹 파상공세

윤호중 “공수처 수사 착수해야” 김남국 “법률 검토 요구는 공범” 이해찬 “국기문란...철저 수사할”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선 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와 같으며 쌓은 인지도가 유일한 자산인 정치 검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윤석열 캠프는 여권 공

작이라는 헛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침몰하는 배의 구멍을 막지 않고 옆 배에 돌맹이를 던지는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 사건은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고발 접수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검사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청이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급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오히려 증거를 대라는 것은 사기꾼이 서민들 돈 다 갈취해놓고 서민이 ‘내 돈 돌려달라’고 하니가 ‘증거를 대라’고 하

는 꼴이랑 똑같지 않냐”며 “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SNS에 “윤석열의 대검이 고발을 작성했는지, 윤석열의 지시나 목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윤석열의 대검이 고발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텔레그램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음으로 윤석열의 지시나 목인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고 추정만 하지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의 관계, 고발장의 특이성 등 고려할 것들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고발을 손준성이 작성한 것이 사실일 경우, 윤석

열의 지시나 목인을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추론했다.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완전 바보 같은 자백을 했다”며 “장 의원은 고발을 김용 의원이 작성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김 의원이 작성해 손준성 검사에게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공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발인으로 보도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법률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그거 자체가 둘이 공범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라고 되물었다.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이미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 받았다면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제가 당 대표를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다”며 “2개 중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었던 것 같다. 그때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혹은)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체제를 교란한 국기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비전 발표회 국민회의대권주자인 원희룡(왼쪽부터), 장기표,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박찬주, 장상민, 박진, 홍준표, 윤석열, 하태경, 유승민 예비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후보검증단 카드 꺼냈지만... ‘윤 의혹’ 대응 고심

선불리 대응했다 역풍 우려 경선 경쟁자들 공세 이어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논란에 대해 후보검증단을 설치하겠다고 일단 방어 모드에 들어갔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연일 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대응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단일대오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는 7일 CBS 라디오에서 후보검증단 설치에 대해 “보통 (당 후보가 선출된 뒤인) 선대위 시절에 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치 공세가 세다”라고 말했다.

검증단은 여론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검증단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일단 고발사주 의혹과 당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에선 각종 공약제보에 대해 법률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고발할 책무가 있다”며 “당으로서의 한 톨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의혹 제기 및 대검의 진상조사 추이 등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튀지 모르는 만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문건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당과)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당이 더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 경우)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은 좀 덜 해질 수 있지만 당은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더 철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검찰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당 자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당이 특정 후보의 의혹을 어디까지 방어해야 하는지 ‘적정선’을 놓고도 난감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경선 경쟁자들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했거나 알고도 목인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광장히 치명적인 문제”라며 “윤 후보 측과 김용 의원 사이에서 있었던 일(대해) (외부에서)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전날 “김용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니 총장의 목시적 지시 없이 그거 가능했겠느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18일의 전쟁’ 돌입

오늘 오후 첫 회의 공개 범위·안건 놓고 신경전

여야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활동 기한인 오는 26일까지 18일간 치열한 대국민 여론전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에 대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협의체는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건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당장 회의 공개 여부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지만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회의의 안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원점에서 언론중재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 면면을 보면 각당의 전략이 엇보인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여당류 추천 외부 위원인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친문파로 분류되고 외부 위원들은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 추천 외부 위원인 문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포함됐다. 언론인 출신 최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더해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인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 차원의 수정 권고를 끌어냈다.
전투력 있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합세해 언론중재법 협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전남 쌀 생산량 타 시·도보다 10~15% 떨어져

나광국 도의원 도정질문서 제기 충남·경북보다 10a당 70kg 낮아

전남지역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타 시·도보다 1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이 7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 10a(약 300평)당 생산량은 441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516kg, 경북 509kg, 전북 501, 충북 491kg보다 10~15%가량 낮은 생산량이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전남의 농민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생산성이 낮아 농가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인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우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잦은 자연재해와 친환경농업 등 재배방식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복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데다 구조적으로는 친환경, 이모작, 간척지 재배 면적이 타 시도보다 5배가량 많아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쌀 생산성 향상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복에 강하고 수량성도 보장되는 ‘새청무벼’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와 함께 친환경 및 간척지 농업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40평(전용) 2억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한,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